

“이젠 민생이 최우선... 미뤘던 송년모임 하세요”



전남일보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

‘내란사태’로 행사·모임 취소·연기 식당가 예약 취소 ‘연말특수’ 실종市,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할인쿠폰道, 지역상품권 지원 175억원 투입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국회의 예산안 감축에 더해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가라앉고 있다.

특히 국가를 뒤흔든 ‘내란사태’로 인해 식당가와 호텔 등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건수가 확 줄어들어 연말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직접 “연말 모임을 가지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탄핵은 탄핵

이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송년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12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표결 등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지역 식당가 예약률이 푹 떨어지자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수출 부진과 환율 급등으로 고달픈 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상품카드 할인을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

비 진작 이벤트,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16일,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발표했다. 오는 30일까지 추진하는 이 프로모션은 주말에만 발행하던 2000~3000원의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하고, 특히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위메프오’와 ‘뽕겨요’를 통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속하게 118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연말연시 민생경제 극복을 위해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4억원(예비비)을 투입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30억원)하고,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 지원(5억원)할 예정이다. ‘떡깨비’와 ‘뽕겨요’ 등 공공 상품배달앱을 통한 할인이벤트와 배달비도 지원(9억원)해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75억원을 투입(예비비 105억원 포함)한다. 2025년 국가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을 축소가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상품카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고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민들도 연말연시 모임 갖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박규정(57·회사원)씨는 “연말 분위기가 하도 험해서 모임을 취소하는 분위기인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송년모임을 권하고 있어 다시 약속을 잡고 있다”면서 “다같이 모여 이번 탄핵과 올 한해 고생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을 쌓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헌재 “27일 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탄핵 사건 중 최우선 심리키로” 주심에 정형식...연구관 TF 구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

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헌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검찰 특수수사본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전담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 재판관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헌재 66명의 헌법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여명 남짓이 참여하게 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스

무한청정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에너지수도 전남이 함께합니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28년 완공

핵융합 외 의료기기, 전력계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한국에너지공대 인공태양 인재 확보

ITER와 공동연구 협력 및 석박사 상호 교류 등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력 등 전력기자재 업체

300개 이상 소재



핵융합스타트업 입주 시 임차료

최대 80%, 36개월간 지원